

제 140회 골드명사특강

주제: 시민사회(분노의 하이킥)

강사: 송호근 교수

일정: 4월 20일 (수) 19:30~21:00

1. 소속 및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교수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2.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 서울대학교 사외학과 학과장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방문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주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 한림대학교 부교수
  - 한림대학교 조교수
  - 미글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센터 연구원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3. 저서
  - 인민의 탄생 2011
  - 시민의 탄생 2013
  -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2013
  - 나는 시민인가 2015 외 다수

역삼동에 있는 한국기술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캄캄한 실내를 확인 하고서야 한국과학기술회관으로 예정된 강의 시간보다도 20분정도 늦게 도착 했다는 사과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휴넷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고 고민을 한끝에 20대 총선이 마무리 되고 난 후 향후 정국과 '제3의 변혁' '시민성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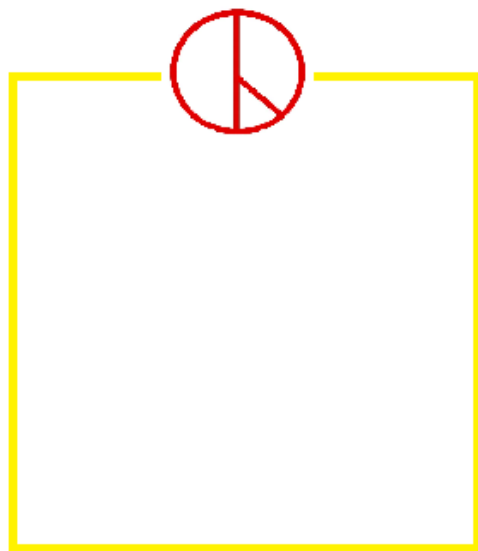
나는 주인인가? 나는 구경꾼이었다. 내가 가진 게 주권인가?

"주객전도는 공천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과 명분이 분명치 않은 칼질을 해댔다. 말이 좋아 컷오프지, 누군 자르고 누군 꽃가마를 태웠는지 아무리 애써도 알 길이 없었다. 욕설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진박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당인(옥새)을 갖고 튀고, 공 권위원장은 조폭 언어를 구사했다. 좌초 일보 직전 감독권을 위임받은 김종인 대표는 뚝심 그 자체였다. 암초로 지목된 친노 성향과 강경파를 뚝뚝 잘라냈다. 난도질 끝에 불쑥 내민 여야 공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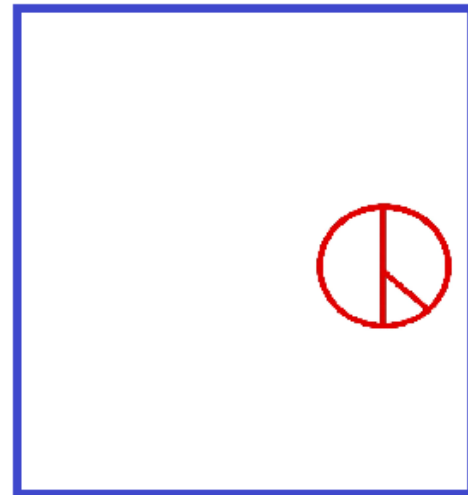
명단에 객은 토를 달 수 없었다. '자, 이제 골라보시라!' 아무튼 찍어야 했다. 명령받은 주권, 그것은 객권이였다."

송교수는 선거결과를 놓고 기분이 언짢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주인인가? 나는 객이다. 투표는 객권이다. 혼란스러움을 뒤로 한 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투표용지에 투표는 했지만...하기와 같이 투표용지에 마크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않나지만...



(기권표)



당의 표는 제대로 마크

유권자중에 40%는 기권을 하고 나머지 30%로 당선이 되면 당선자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연성이 낮아진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하여도 한 정치학자는 할 수 없이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우리나라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분리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1개의 정당이 있다. 어떤 유권자는 더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마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일본은 기명투표 방식을 쓰고 있어 후보자 이름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써야 한다. 물론 기표소 안에 후보자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있다고 한다. 오·탈자 또는 필요 없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무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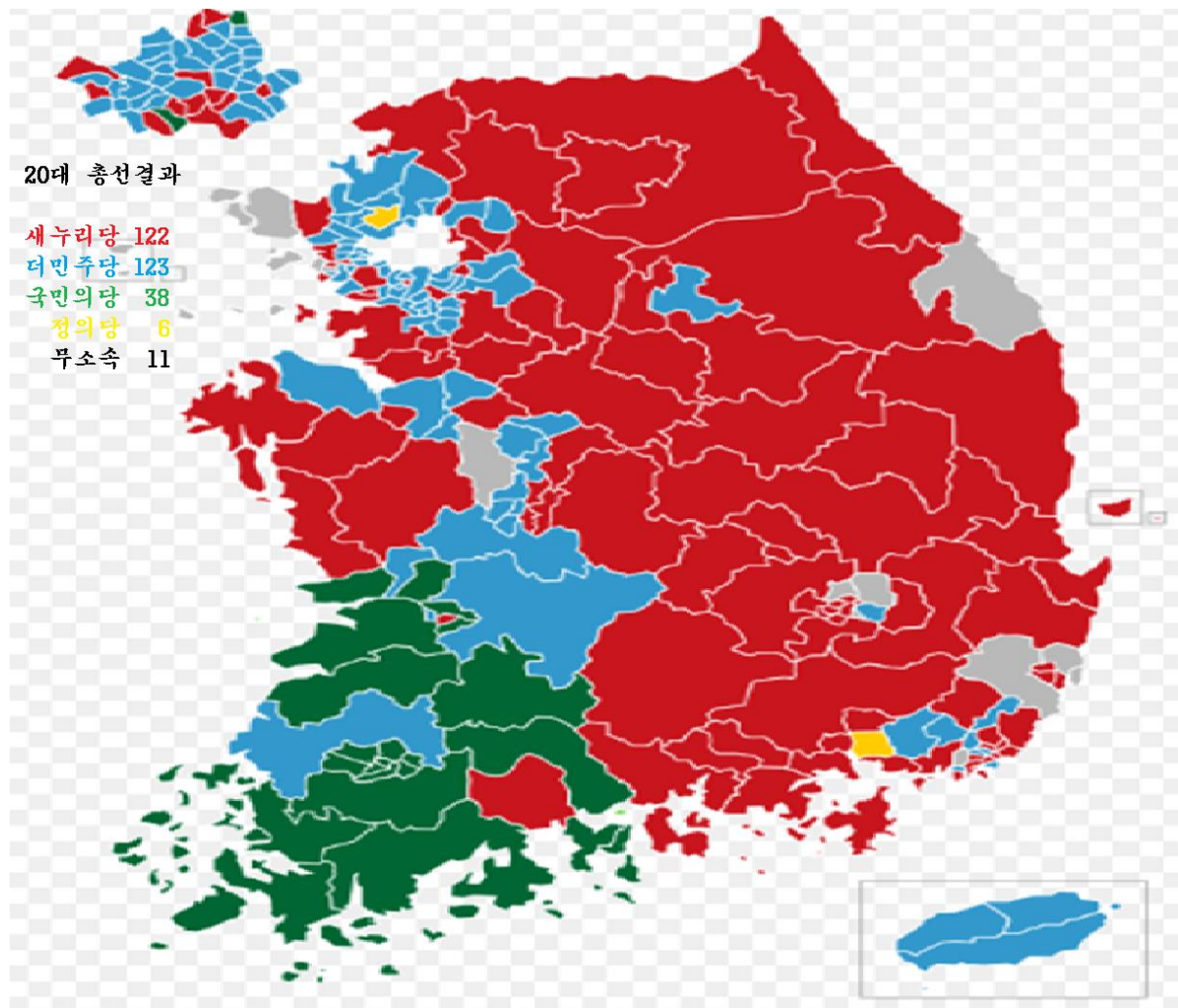
시골에서 노인이 눈이 잘보이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글씨 연습을 할 것이다. 후보자가 전 몽주 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주권이 아니다.

송교수는 전국 5개 도시에 각 1천명씩 당원이 5천명이 되면 정당의 당수가 될 자격이 된다. 총선에서 유권자로부터 3%이상의 표를 받으면 정당으로 중앙에 진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객이 날린 분노의 하이킥! 20 대 총선은 그것이다. 그러니 뒤집어질 수밖에. 객의 분노는 무서웠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쫓겨났고, 대신 지리멸렬한 더민주당이 불러 왔다. 오죽했으면 보수의 아성 강남·송파·분당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받아들일 세입자가 마땅치는 않았지만,

총 122 석 중 70%를 야당에 줬다. 새누리당은 대구 본가(本家)에서도 혼쭐이 났고 문중이라 여겼던 부산에서는 더 곤욕을 치러 결국 대갓집을 비웠다. 더민주는 본가인 호남에서 쫓겨났는데 수도권에 불러주는 통에 얼떨결에 대갓집을 차지했다. 이런 어부지리가 있을까, 표정관리에 애를 써야 할 판이다. 분노의 표심에 힘입어 호남에 입주한 국민의당은 타 지역에서 더러 선전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본가에 셋방살이라도 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구경꾼이 날린 분노의 하이킥



주권의식의 율화증은 정당의 원적(原籍)을 거의 알아치울 만큼 무서웠다. 주인이 당연히 계약을 연장해 주는 '텃밭정당'은 없다는 것을 선언한 선거였다. 이른바 '월세(月賃)정당'이 탄생했다. 여야 3당은 이제 주인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 언제라도 짐을 싸야 할 '월세(月賃)정당'이 되었다. 세입자를 평가할 기회가 매년 찾아온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수도권에 국민의당을 호출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은 경북으로 퇴각할지도 모른다. 정권은 수도권 중산층의 향배에 달렸다.

1988년(노태우 정권) 13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민주정의당	125
평화민주당 민주당	129
공화당	35
무소속	10

지역주의를 탈피 해야 하는가?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이 붕괴한 후 중세를 거쳐 도시 국가로 꾸준히 분열되어 왔었기에 이탈리아는 한 집단체로서의 인식이 매우 적다. 오죽하면 이탈리아 통일의 일등공신인 카보우르가 통일 이후 “자 이제 이탈리아는 탄생했고, 이탈리아인을 만들어야겠네? 중세에 중부 이탈리아 교황령이 생기면서 북부와 남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단절된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북이탈리아가 발달된 상공업으로 남이탈리아보다 부유해 경제적 갈등도 심하고, 북이탈리아는 독립을 목표로 하는 정당까지 있을 정도다.

벨기에 종족으로 나뉘어 있다. 아예 서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 문화적인 유대감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고, 플랑드르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격히 추락, 왈로니 중공업 몰락으로 추락, 플란데런은 금융과 관광업으로 다시 상승으로 복잡한 경제상황을 거치면서 각 지역간 대립은 되돌릴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브뤼셀(수도), 왕실, 벨기에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 때문이라고.

노태우 정권 초기 13대 총선과 표심이 정확히 같다. 당시 민정당 125석, 평민당과 통민당 합쳐 129석, 공화당 35석 분포였다. 정권은 쫓지만 독재본가 민정당을 견제하라는 요청이었다. 합의 않고는 파열음이 터진다. 견제!, 합의!, 권력분산! 노태우 정권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부정축제로 인해 그의 치적은 가려져 있지만 권위주의 정당을 민선으로 등등의 혁신을 많이 했다. YS는 DJ, JP 3당의 합당 주역이며 당시에는 야합이라는 비난도 듣기도 했다.

2016년 표심은 3당 체제의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훈계정치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의논해서 하시오!’라고. 통치자에서 조정자로 변신하라는 맹렬한 호소를 박 대통령은 읽어 내야 한다. 마음속 화쟁(和爭)위원회가 필요하다.

신념에 맞지 않는 흥정과 교환의 정치에도 선뜻 응해야 한다. 야당연합이 들고 나올 상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거센 증세 압박에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폐기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연금 허물기, 노인연금 30만원 지급, 재벌대기업 규제강화 피켓을 들고 나설 야당의 강공에 직면할 것이다. 거기에 국정원·세월호 청문회 압박, 국정교과서 철회가 겹치면 정국은 소용돌이다. 무소속

을 몽땅 영입해도 겨우 130석 남짓, 167석인 야당연합을 어찌 이겨 낼까. 보수정권에서 받은 서러움을 단번에 씻고자 버르는 수십 명의 특무상사들이 몸을 풀고 있다.

유럽은 계급정당, 농민당, 사회주의당,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공산당으로 이뤄진 북부유럽이 있고, 중부유럽은 10개의 정당, 남부유럽은 20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작은 시민단체 10~15개의 정당이 합쳐 연합내각을 형성한다. 트랜스포 미스모라고 한다. 1991년에 우리나라는 3당 합당을 한 이유는 정권을 안정화 하기 위함인데 현재는 합당 가능성은 zero에 가까우며 한국의 정치는 향후 2년동안 시끄럽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송 교수는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은 호남에서, 영남, 충청, 제주에서는 곤욕을 치렀고, 호남은 국민의당을 빈자리에 앉혔다.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청문회, 국정원, 세월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한다/변한지 않는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월세정당'의 탄생했고 무기한 전세정당=> 시한부 월세정당으로 갈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6월, 야당의 법안 끼워 팔기에 화가 난 대통령이 분노의 하이킥을 날렸다. 여의도 정치를 '난센스'와 '패권주의'라 질타했고,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로 반송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배신자'가 됐다. 그 분노의 하이킥을 채 1년도 안 돼 구경꾼이 돌려줬다. 3당 체제가 파열로 갈지 여부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 달렸다. '조정의 여왕'으로 변신한다면 아직은 유권자 가슴속에 남은 애정이 발화할 텐데. 최근에 박 대통령은 "민의를 무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운을 뗐다. 내년 봄까지는 야당의 싹김곳, 다음 열 달은 대선정국이라는 활화산, 새 정권이 들어설 2018년은 거중조정과 지자체 선거로 날이 샌다. 훈계정치로 민의를 돌파할까, 아니면 화쟁정치로 회군할까.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다. 증세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오를 것이고, 일정소득이상은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이다.

**재료비 구매 불안정으로 자영업자는 세금 때문에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세율이 적용되고, 기재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1997년 간이과세제도 도입)

매출액 기준이 18년 전 마련돼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가세법 개정안과 간이과세제도 폐지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지하경제 양성화 기초에 역행하고,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면 탈세가 늘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점진적으로 간이과세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드러냈고 결국 이법안은 계류됐다.

자영업자들은 죽을맛이다. 현장에서 당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느껴진다. 2017년 대선에 signal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 주권은 회복되었지만 정국이 불안하다. 국민은 대통령이 알알서 해줄것이라고 믿고 있다.

더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월세정당으로 선택 받았다.

수도권 유권자 1200만명(의석수 122석) 선택받은 정당이 국회에서 권력의 행사 할 수 있다. 기권층 30%, 서민층 30%, 중산층40%으로 분류 되고 있고, 중산층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의 하이킥’ 중앙일보 2015.6.19.

대통령이 격노(激怒)했다. 의회의 옥죄기에 비답(批答)을 내린 통치자의 표정은 상기되었고 말은 떨렸다. 분노의 하이킥! 여의도 정치는 ‘난센스’ ‘구태’ ‘패권주의’로 호명되었고, 국회법 개정안을 고스란히 청와대로 배송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배신자’가 됐다.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을 발령했다. 분노의 거침없는 하이킥에 걷어차인 국회법 개정안은 쏘~ 하고 날아가 여의도 상공을 뒹췄다. 안 그래도 목이 타는 올여름, 한국 정치에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하기는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정권 초기부터 야당의 주특기인 발목잡기가 유감없이 발휘됐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둬드는 악재에 휘청거린 정권에 올라미를 씹워 꼼짝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야당이였다. 정권 반환점이 코앞인데도 4대 개혁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추진된 게 없다. 게다가 끼워팔기라니! 그토록 공들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따라붙었고, 관광진흥법에 최저임금법이 나란히 올려졌다. 3년째 동면하는 61개 민생법안에 대체 몇 개의 야당 법안이 더 없힐까? 난센스란 바로 이 웃기는 빅딜을 지칭한다. 야당 법안을 받지 않으면 민생법안은 없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이 거부권 전략은 대통령의 율화를 돈우는 화병의 근원이고, 결국 대통령이 나 홀로 하이킥을 날리게 만드는 동맥경화였다.

객이 날린 분노의 하이킥 중앙일보 2015.6.19.

주인(主人)을 박대한 대가는 쓰렸다. 패배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은 적이 당황했을 거다. 아님 껄스민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른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 일렀거늘 감히 배신을 때리다니. 사실 배신을 때린 것은 청와대와 집권당이였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진정 섬기겠습니다.’ 정권마다 읊소한 ‘머슴론’이나 ‘섬김서약’이 엇그제 일인데, 지난 3년은 마치 국민이 생존을 투탁하는 구활비(口活婢) 같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추상같은 호령에 놀려 벼슬아치의 상소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일반 서민이 저잣거리에서 올리는 상언에도 대체로 비답(批答)은 없었다.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 객(客)이였다.

해석1 "통치 양식을 바꾸라는 주인의 강력한 명령/호소"

해석2 지도자 없는 정당 비효율!



새누리는 지도력 파괴하지 않으면 괴멸 될수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거대한 정치 거물들(박지원, 천정배, 김한길)과의 내부 조직력 조율의 숙제를 안고 있다.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물들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분노의 표심, 그 진앙지는 청와대이고, 박 대통령이다. 군주론적 나 홀로 통치양식에 단단한 장벽을 둘러쳤다. 2016년 표심은 3당 체제의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훈계정치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의논해서 하시오!'라고. 통치자에서 조정자로 변신하라는 맹렬한 호소를 박 대통령은 읽어 내야 한다. 마음속 화쟁(和爭)위원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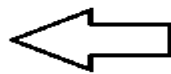
신념에 맞지 않는 흥정과 교환의 정치에도 선뜻 응해야 한다. 야당연합이 들고 나올 상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거센 증세 압박에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폐기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연금 허물기, 노인연금 30만원 지급, 재벌대기업 규제강화 피켓을 들고 나설 야당의 강공에 직면할 것이다. 거기에 국정원·세월호 청문회 압박, 국정교과서 철회가 겹치면 정국은 소용돌이다. 무소속을 몽땅 영입해도 겨우 130석 남짓, 167석인 야당연합을 어찌 이겨 낼까. 보수정권에서 받은 서러움을 단번에 씻고자 버르는 수십 명의 특무상사들이 몸을 풀고 있다.

특무상사 들의 한풀이...



여소야대 130 vs. 167

"4대 개혁"



경제민주화  
국민연금  
노인연금  
청년일자리  
증세

서민생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1988년 개헌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헌법에는 경제 민주의 운영이 있지만 현재 헌법에서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론은 애미한 부분이 있다. 좀더 토의가 필요하다.

20대 청년 수당 및 사회적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성남처럼 과도한 것은 무리가 있다.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4(조부,조모,외조모,외조부), 2(부,모), 1(자녀)로 사회구조가 변하게 된다. 현재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비정한 명령'의 삶을 살게 된다. 성장을 해서 6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정국4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원 개입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철회, 노사정합의 철폐, 각종 법안 철폐 등이다.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전주에 모고등학교 교장샘으로 가신분께서 2개의 교과(교학사, 다른 출판)를 선택했지만, 학부형들의 피켓 시위 및 사회적 비난이 심해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했다.

선진국 사례를 GMP 만불~만오천불사이에 분배투쟁이 가장 크다.(복지제도를 늘리고...)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 등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뚫고 공공 부문 개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추진력을 발휘했지만, 단지 강공(強攻)만 쓴 것은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여론전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공기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과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고립을 자초했다.

대처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76년 IMF경험, 국가는 Default상태로 직면했고, 1984년 영국 정부가 영국통신 매각 방침을 밝히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당시 대처는 유명 광고대행사를 고용해 공공 개혁의 이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결국 영국통신 직원들도 노조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고, 직원의 90% 이상이 민영화된 영국통신의 소액주주로 참여했다. 1984년 1년 가까이 진행된 광산 노조 파업 때는 무관용 강경 원칙으로 대응해 노조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영국은 노동법을 6번 개정을 했고, 노조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했다.

토니블레어총리는 노동당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 국민이 바꾸지 말라고 했기에 받아 들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시민사회는 엉망이다." 마냥 정치에만 바랄 수 없다. 시민사회 활동은 9%대이다. 공익을 목표로 1주일에 1번은 어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자발적 결사체" 시민사회 활동을 배양 해야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보여서 환경문제, 반핵문제, 원자력 폐기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회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개인적인 지침이 만들어 진다.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보다는 상계 동에서 자발적 모임이 많다.

최근에 강남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고령 경비원을 해고했지만, 강북에서는 경비들의 시간을 줄여서 해고보다는 고용안정화를 취했다.

'90~'00년대에는 이념이 너무 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쟁점 이슈 중심으로 합의를 했다. 좌/우파 상승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리정치는 부딪친다. 시민사회의 미성에서 토론하는 사회를 끌어 내야한다.

송교수도 시민단체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유럽에서는 고등학교에 공산당, 사회당 등의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으며 학생들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안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너희집은 왜 잘사니? 등등의 소재를 가지고 토의를 한다.' 유럽은 Political education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치가 생긴다는 이유이다. 기업에서는 유상으로 1년에 2번(2주)을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사고발생지는 일본이지만, 이 충격으로 가장 큰 정책적 전환을 한 나라는 독일이다. 5월 30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2022년까지 원전을 100%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0년에는 생태에너지 시대가 열린다. 여기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송교수는 독일 전역에 시민단체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난것이다. 시민정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철폐 한다고 하면 전기료 2배 상승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올것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어렸을때부터 어른사회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교육 필요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원 300명중 250명은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명의 학생들에게 사회 멤버십이 있는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자동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각인을 해야 합니다.

어느 법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민사소송건이 일본에 5배 입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입니다.

송교수는 사회공부만 40년 이상을 해왔지만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동맥경화증! 희망바닥! 입니다. 과거사회는 일방적으로 했지만, 현 시대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만5천불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노동개혁등을 통해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동력은 사회로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접전은 21세기 문명을 개막하는 팡파르였다. 바둑은 상대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 대국을 마친 이세돌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것은 21세기 문명의 장엄한 출발을 알린 세기적 대사건이었다. 인간의 뇌세포(뉴런)는 약 1000억 개, 연결고리인 시냅스(synapse)는 100조 개에 달한다. 그런데 중간마디가 고작 830만 개인 알파고가 이겼다는 사실은 인간 뇌에서 차지하는 셈 능력은 아주 작고 나머지는 감정·이성·느낌이라는 뜻이다.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알파고에게 가르친 한 수

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우수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사회적 제도가 가로 막고 있어서 안타깝다. 교수들도 천재가 많다. 일년에 논문 몇편 써내기...이와 같이 막힌 사회제도를 풀어 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현실 - 울산

상황 2 마트, 숙박업, 택시, 술집, 학원 이 썰렁하다.

평년에 70 척을 수주 했지만 저유가 시대로 접어든 최근에 2 척의 석유시추선을 수주 했습니다. 시추선을 울산앞 바다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발주를 해놓고서 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여직책으로 석유시추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6 만명의 직원중 35000 명은 비정규직으로 해고가 불가피할 사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선박 수주가 줄어 든다면에 대한

임금동결, 복지확대, 일감 나누기 거부, 정리해고 반대 파업 → 위기 흡수 능력 축소

정직원 평균 연봉은 1 억원, 협력상 평균 연봉은 8 천만원 입니다.

그들은 스나미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독일회사인 폭스바겐 노사는 93년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은 20%(주36시간에서 28.8시간)를 단축하는 대신 인건비를 20%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고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94년 이후 해고가 예고됐던 3만명의 고용을 보장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결핍되었나? 공존·공생의 지혜=시민성의 본질

박근혜 대통령의 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성 발의 지표는;

1. 한달에 몇시간은 공적인일에 할 애
2. 시민단체
3. 월급에서 1% donation
4. 공적인일에 5분 고민
5.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읽는 것.

국민이란 국가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는 수직적. 시민은 수평적

1970년대에는 국민교육헌장, 국민체조등의 노예관계로 모르는것에는 관심이 없음.

우리나라는 단단한 사회가 아니다. 세월호 2주기가 주는 교훈은.

만약, 내가 선장 이준석의 상황에 처했다면 위기를 어떻게 대처 했을까?

처음 당하는 사태로 하늘에는 헬기가 주변으로는 구조선이 보였다. 선장은 13명의 선원을 불러서 탈출을 하고 나서 배를 뒤돌아 보니 가라 앉고 있었다.

타이타닉의 선장은 선원을 불러 놓고서 be British

선장은 안전 항해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이다. 안전은 승객과 화물, 선체 일체를 포함한다. 승객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남성의 순으로 긴급 대피시키되 해수면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유사시 선장은 자신의 선박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은 선장의 직업윤리이자 명예이다.

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사고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1700명의 승객탈출을 지휘했고, 남은 선원들과 함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면 운명을 같이 했다. 사람들은 그의 숭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영국 리치필드에 스미스 선장의 동상을 세우고 "영국인답게 행동하라(Be British)"는 그의 말을 새겼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 한가.

평범한 한국인은 공감대가 없었다. 사회적 성장을 많이 했지만, 세월호는 시민들의 언어가 없었다. 우리는 시민사회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Be Korean(한국인 답게). 우왕좌왕 했다.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가에 수직적인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언어가 필요하다. 시민교육을 입법화 해서 무엇이 고달프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작은 사회를 육성 해야 한다. 당분간 저성장 시대에 머물러야 하는 이시점에 20대 총선의 주인으로부터 '분노의 하이킥'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성장 꼬리표를 자를수 있는 시민사회의 초석을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추진 해야 한다. 한국인 답게! 주인의 자격으로 살기위해서 자발적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

작성자 박윤식